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정책위원회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Acti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Policy Board)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Tel. 02.3675.1987 Fax. 02.766.6025 <http://kfhr.org>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

2014년 6월 3주차(2014.6.6-6.19)

요약(Summary)

○ 주요뉴스

1. 병원도 호텔·여행업 가능, 의료법인 부대사업 입법예고(6/10)
2. 24일 보건노조 5000명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6/13)
3. 서울대병원 등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예고(6/19)

○ 국내정책

-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재난의료 예산 208억 '9.5배 증액'
- 8월부터 모든 종합병원에 '비급여 가격표' 비치
- 담뱃값 인상 이르면 내년 초…WHO 50% 인상 권고
- 장애인 전동보장구, 구입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급여 가능
- 건강보험에 간병보험 추가 신설 추진
- 김용익 의원, 병원 영리 자회사 금지 및 부대 사업 확대 제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 건보료, '소득중심 단일화'…부과기준 체계 바뀐다
- 건정심, 치과 2.2%, 한방 2.1% 수가인상…보험료율은 1.36% 인상

○ 의료산업

- 전국 최대 규모 메디텔 '대구메디센터' 준공
- '75세 가입 가능' 노후실손보험 8월 출시
- 폐업 진주의료원에 진주보건소 이전 추진 논란

-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건립에 임대형 민자투자(BTL) 추진

○ 약제뉴스

- 의약품도매협회, 안연케어 지분매각 적정여부 조사 요청

○ 관련단체 동향

- 의협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원천 반대"
- 5개 보건의약단체, 의료영리화 강행 중단 촉구
- 개원의협의회, 의료법인 숙박업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 새 의협 회장에 '靑노환규파' 추무진 당선

○ 기타뉴스

- 국민의료비 연 97조원 규모…GDP 대비 7.6%
- 수준
-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 구성 윤곽(6/19)

○ 발간자료

1. 병원도 호텔·여행업 가능, 의료법인 부대사업 입법예고(6/10)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아 호텔과 여행, 온천 등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따라서 의료법인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의료서비스라는 본업이 지장 받지 않도록 투자 규모는 의료법인 자체 순자산의 30%를 넘을 수 없다.

복지부는 자법인 설립·운영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로 한정됐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 공고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관광호텔인 ‘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두고 해외환자들의 국내 의료관광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의수과 의족, 전동휠체어 등의 맞춤형 제조에도 의료법인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제3자가 의료법인의 건물을 빌려 생활용품·식품 판매업 등 환자·종사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와 영업하는 일도 가능하다.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시도지사·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설립허가 취소 등 의료법상 행정적 처분과 함께 세법상 받은 혜택도 환수된다고 설명했다.¹⁾

-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page=1&CONT_SEQ=301192

2. 24일 보건노조 5000명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6/13)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며 유지현 위원장의 단식을 시작으로 천막농성, 그리고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예정된 총파업은 서울역에서 주요 대학병원 등 62개 병원의 약 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간협 등의 보건의료단체들이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찬성, 반대, 우려, 유보 등 어떤 입장이었는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야3당(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및 보건의료계(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사협회·보건의료노조), 노동·시민사회단체(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운동본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첫 공동입장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지현 위원장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전조합원 산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4일 경고파업에 돌입하며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7월 2차 파업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는 7월 22일 2차 파업에는 1차 파업보다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것이기에 규모는 지금보다 더욱 커진다.²⁾

3. 서울대병원 등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예고(6/19)

병원계 노조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해 들썩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 노조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오는 17~20일 파업 찬반투표를 겸한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1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소속 노조와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총궐기 투쟁주간에 맞춰 오는 27일 1차 경고파업을 선언하고, 28일까지 이틀간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노동조합도 17~20일 파업 찬반투표와 함께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 7월 동맹파업, 8월 가짜 공공기관 정상화 반대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³⁾

국내 정책

1.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6/10)

하루 최고 11만원(본인부담금 기준)을 웃도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가 오는 9월부터 2만3,000원으로 뚝 떨어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 기준이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인데 병실이 없어 값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했던 환자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책을 발표했고 이번 입법예고는 그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 인원 기준이 6인에서 4인 이상으로 바뀐다. 현재 4~5인실은 상급병실로 분류돼 일반병실과의 차액을 환자가 모두 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6인실의 하루 입원료는 4만8,850원인데 건강보험이 80%를 지원해 환자는 실제로 9,800원만 낸다. 하지만 상급병실인 4인실에 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6만3,000~11만1,000원, 5인실은 4만

2,000~4만4,000원으로 훌쩍 뛴다.

9월부터는 4~5인실이 일반병실에 포함되면서 4인실은 6인실 입원료의 160%, 5인실은 130% 수준에서 건강보험 수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부담금 20%(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30%)를 적용하면 환자의 실제 부담은 4인실이 하루 2만3,450원, 5인실 1만2,700원으로 지금보다 매우 저렴해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병상이 약 2만1,000개 늘고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4%에서 83%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병상이 확대돼 가격 문턱이 낮아진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책정해 일반병상(20%)과의 가격 차이를 뒀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입원비 전액을 모두 환자 부담으로 돌리기로 했다. 다만 격리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또 병원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기존 6인실을 4인실로 대거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병상의 50%는 실제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6인실 기본 입원료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일반병상 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강제할 방침이다.⁴⁾

2. 재난의료 예산 208억 '9.5배 증액'(6/10)

여객선 세월호 참사 후 재난의료 대응체계 예산이 현재보다 10배 가까이 늘고 재난거점병원과 응급 의료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예산은 올해 22억원에서 내년 208억원으로 9.5배 증가했다. 복지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현재 20개인 재난거점병원을 3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난거점병원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식당·주차장에 예비병상을 설치하고, 가스·방사능 등 독극물에 노출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복지부는 해당 권역의 재난의료를 총괄하는 '재난 의료 디렉터(응급의학 전문의)'를 재난거점병원마다 1명씩 지정하고, 재난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재난 의료지원팀(디매트·DMAT)도 현재 전국 65개에서 105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119상황실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 직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임시 설치된 상황실을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로 개편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⁵⁾

3. 8월부터 모든 종합병원에 '비급여 가격표' 비치(6/11)

오는 8월부터 모든 종합병원 데스크와 접수창구에 비급여 의료 서비스 가격표가 비치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일 "지난해 9월 개정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오는 8월부터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앞으로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료, 선택진료료 5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정부가 정한 용어와 순서에 맞춰 이를 안내 데스크와 접수창

구,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

또 초음파 검사료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약제비 가격정보는 '최저·최고 비용'을 삭제하고 '비용'으로 표시하도록 했다.⁶⁾

4. 담뱃값 인상 이르면 내년 초…WHO 50% 인상 권고(6/11)

보건당국이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금연의 날 행사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부내 의견 조율도 어느정도 마친 상황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국가별 담뱃값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담배 1갑당 가격이 2500원으로 주요 15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담배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1만6477원에 달한다. 한국에 비해 담배 가격이 낮은 국가는 태국 2045원, 중국 909원 정도다. 임 국장은 구체적인 담배값 가격 인상 폭과 관련해서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상당 폭'을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WHO는 "모든 나라가 담뱃값을 50% 인상하면 3년 안에 흡연자가 4천900만 명, 흡연 사망자도 1천100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⁷⁾

5. 장애인 전동보장구, 구입 후 3개월 이내 신청시 급여 가능(6/14)

앞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지원 절차를 개선해 전동보장구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절차 이외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경우에도 구입일로부터 '3월 이내' 신청한 경우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하여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 급여비를 지급 하고 있다. 이는 급여 대상여부 결정 전 고액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후, 급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구입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이다.

전동휠체어 기준액은 209만원,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이며, 급여 대상이 되면 구입비용의 80%(차상위 1종 : 100%, 차상위 2종 85%)를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⁸⁾

6. 건강보험에 간병보험 추가 신설 추진(6/16)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해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기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간병급여를 실시하도록 했고, 간병급여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간병보험료를 추가로 징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병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료율 규정을 준용토록 했으며, 간병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도 건강보험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직접 간병하거나, 하루 통상 7~8만원, 한달 평균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간병인 고용에 연 2조원(2012년)의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간병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직접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사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입원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해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함으로써 간병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⁹⁾

7. 김용익 의원, 병원 영리 자회사 금지 및 부대사업 확대 제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6/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일명 '의료 영리화 금지법(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제한하며,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했으며,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법률에 명시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부대사업의 법률상 위임 규정을 삭제해 정부의 뜻대로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제한하고, 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토록 하며, 의료법인이 정해진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이 규정한 '기타 환자와 의료업무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대폭 확대했고,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병원을 '비영리'로 운영하도록 제한한 법 규정을 교묘히 피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¹⁰⁾

8. 건보료, '소득중심 단일화'…부과기준 체계 바뀐다(6/17)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17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되, 소득이 없는 세대에게는 기본건보료만 받고 연금·퇴직소득

등에 대해서도 전부가 아닌 일부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기획단은 같은 해 11월 6차 회의에서 10개 부과체계 모형을 제시했다. 이들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보수)·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일용근로 소득 등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된다. 또 무소득 세대에는 기본(최저) 건보료가 적용되고, 상한선은 평균 건보료의 30배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러한 기본 가정 아래 ▶최저보험료 수준 8240~3만7600원 ▶연금·퇴직소득 반영 비율 50~75% ▶상속·증여소득 반영비율 50~75% 등으로 변수를 바꿔가면서 크게 10가지 부과체계안을 도출해냈다.¹¹⁾

9. 건정심, 치과 2.2%, 한방 2.1% 수가인상...보험료율은 1.36% 인상(6/19)

치과와 한방의 내년도 보험수가(환산지수)가 각각 2.2%, 2.1% 씩 인상된다. 또 보험료율은 1.36%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율은 6.07%가 된다.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표결처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2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치과와 한방 수가 인상률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수치는 각각 2.3%와 2.2%. 복수안은 이 수치에서 ±0.1로 마련됐다.

치과는 2.2%와 2.4%, 한방은 2.1%와 2.3%였다. 논박 끝에 건정심은 표결에 부쳤고 결국 치과 2.2%, 한방 2.1%로 결론났다. 앞서 의약단체들은 올해와 동일하게 치과 2.7%, 한방 2.6%를 인상해 줄 것을 공동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보험료율 인상률은 1.76%, 1.36%, 1.05% 등 3개 안이 제시됐다. 역시 표결처리해 1.36% 인상하기로 정했는데, 건정심 공의대표 위원들이 모두 1.36%를 선택해 이뤄진 결정이었다. 사실상 정부의지대로 관철된 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 1월부터 5.99%에서 6.07%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중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중 1차년도 사업에는 2000억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이견 없이 결정됐다.¹²⁾

의료 산업

1. 전국 최대 규모 메디텔 ‘대구메디센터’ 준공(6/11)

대구광역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메디텔 운영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11일 준공식을 시작으로 고급의료 서비스와 특급호텔의 기능을 한 건물에서 통합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대구메디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메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연면적 3,500평)로 지난 2013년 1월 착공해 올해 6월 완공됐다.

대구시는 대구메디센터 준공이 지역 의료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는 대

구메디센터를 병원 및 뷰티 등 의료관광 관련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건강검진, 성형, 피부, 치과, 안과 등 다양한 진료과 병의원을 입점시킬 방침이다. 실제로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대구메디센터 3층에는 뷰티·네일샵, 4층에는 의료R&D기관, 5층 피부관리실, 6층 건강검진센터, 7층 치과병원, 8층 안과병원, 9층부터 13층에는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등이 입점할 계획이다. 또 14층부터 18층은 호텔로 운영되며 호텔에서는 의료관광객들에게 호텔객실을 입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도 제시할 계획이다.¹³⁾

2. '75세 가입 가능' 노후실손보험 8월 출시(6/18)

오는 8월부터 최대 75세 노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값싼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보험료도 현재 3만~5만원보다 20~30% 정도 낮춰 노년층의 부담이 줄어든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입원은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원 30만원, 통원의 경우 3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급여 부분 20%, 비급여 부분 30% 추가 공제된다.

보장금액 한도도 커진다. 지금까지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의 경우 회당 30만원(최대 180회) 한도였지만 앞으로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통원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이 한도다.¹⁴⁾

3. 폐업 진주의료원에 진주보건소 이전 추진 논란(6/19)

지난해 5월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 건물에 서부청사를 열려는 경남도가 이곳에 진주시보건소 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최근 경남도에서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흥준표 경남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보건소 기본 현황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보건소 인력 배치, 조직 체계, 예산 사용 등 모든 자료를 취합해 경남도에 보냈다.

경남도가 서부청사 개청을 추진하는 진주의료원에 진주시보건소를 이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노조의 반발과 보건복지부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계속 사용해야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경남도로선 지하 1층 지상 8층에 전체 면적이 2만9천843㎡인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만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크다는 지적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주시는 보건소 이전에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해 4월 9억9천만원을 들여 현 보건소 건물을 개·보수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낡고 협소한 보건소 신축과 개·보수를 놓고 수년간 논란을 빚다가 개·보수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2009년 국비 24억원 등 54억7천만원으로 보건소 이전 부지를 샀으나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신축이 무산되자 국비를 반납했다. 이에따라 보건소를

이전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를 질타하는 시민 여론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해 온 보건의료노조 와 야권 정치인들의 강한 반발도 우려된다.

경남도는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진주의료원 건물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에 서부권 개발본부와 농업 분야 등 3개 국 단위 부서를 입주시켜 개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¹⁵⁾

4.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건립에 임대형 민자투자(BTL) 추진(6/19)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건립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건립사업 비용은 최소 1,00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660억원은 BTL 방식으로 민간자본이 유치된다. 그동안 서울대병원은 경영악화의 이유로 매년 첨단외래센터 건립 을 유보시켜왔다. 지난 2009년 첫 건립계획이 구상된 이후 5년이 지난 것이다.

첨단외래센터는 지하 6층 규모로 지어지며, 지하 1~3층에는 대형마트, 안경원, 미용실, 의료기기판매, 식당, 기념품점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병원 입장에선 현재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본원 밀집도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건립에 대한 의지가 높다.

하지만 첨단외래센터 건립을 두고 병원과 병원노조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무리한 시설투자로 인해 과잉진료 및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병원은 BTL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BTL은 시설 건립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 협약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받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이다. 따라서 수익이 취약한 교육·복지·문화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약 20년간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낮다는 주장을 고수 중이다. 만약 병원이 첨단외래센터 건립을 BTL 방식으로 진행할 시 매년 약 54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54억원은 매 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 29억7,000만원과 20년 후 원금상환이 가능하도록 이자율 3%를 적용한 24억 6,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병원 노조측은 장기적으로 병원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약 1,000억원의 사업비는 2009년 당시 책정된 비용으로, 내부 공사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돼 실제 사업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년 지불할 금액이 54억원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2013년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첨단외래센터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사가 진 행 중인 심장뇌혈관병원의 완공 시기를 늦추는 등 시설투자를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¹⁶⁾

약계 뉴스

1. 의약품도매협회, 안연케어 지분매각 적정여부 조사 요청(6/16)

의약품도매협회가 안연케어 적정성 여부에 대해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 요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연케어는 연세대학교의료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직영 의약품도매업체로 올해초 대기업 계열인 아이마켓코리아가 750억원에 주식 51%를 인수한바 있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안연케어 지분 따라 세브란스병원과 13년간 의약품을 비롯해 진료재료 등 거래 유지를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도매협회는 연세대학교의료원이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는 안연케어가 세브란스병원과 거래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안연케어가 병원 거래에 이어 약국 거래까지 진출 의사를 밝히자 도매업계는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실제 약업발전협의회 임맹호 회장도 최근 안연케어의 시장 확대 추진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고 도매업권을 수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의약품도매협회는 51%의 지분을 750억원에 매각한 것은 합법성을 가장한 리베이트로 거래 안전성을 담보로 받은 750억원은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세대학교의료원이 여전히 49%의 지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매년 배당을 통해 편법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료원이 세브란스 산하병원에 독점적인 의약품 납품권을 주고 편법으로 아이마켓코리아를 끌어들여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도매협회는 파악하고 있다.¹⁷⁾

관련단체 동향

1. 의협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원천 반대"(6/13)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에 대해 다시금 반대 입장을 밝히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신설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

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위험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예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중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즉, 위임입법이 가능한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을 재량권을 지나치게 일탈해 정부 해석만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국회의 입법 기능 등 정책결정 과정을 배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기 논의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중 임대업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나 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메디텔 내에만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가능케 하는 소위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할 경우 주된 활동분야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성형, 피부, 검진 등의 서비스에 집중됨으로써 환자편의 제고보다는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임대업과 연관된 중개업자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개입되는 상황이 증가, 특히 의료 중개업자들은 사무장병원과 연계돼 의사들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가 근본 원인은 방치하고 의료기관 임대업, 호텔업 등 진료외적인 수익활동이라는 편법 대책을 마련한 것이 주된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¹⁸⁾

2. 보건의약단체, 의료영리화 강행 중단 촉구(6/12)

개 보건의약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5개 단체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관련 정책에 대한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진료에 전력해야 할 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거나, 의료인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신진료에서 벗어나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창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¹⁹⁾

3. 개원의협의회, 의료법인 속박업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6/19)

의료법인 내에 메디텔 의원 임대가 허용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개원의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인 내에 메디텔 의원 임대 허용을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제60조 10호는 위에 밝힌 바와 같이 편의시설의 임대업인데 의원이 편의시설로 분류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개협은 “메디텔의 요건으로 연간 외국인환자 1,000명(서울 3,000명)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외국인 환자 21만명이 넘는 시점에 유명무실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즉, 병원은 거리나 장소 제한없이 전국 어디나 의원을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개협은 "이는 작년 12월 투자활성화 대책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²⁰⁾

4. 새 의협 회장에 '親노환규파' 추무진 당선(6/19)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추무진 전 경기도 용인시의사회장이 38대 의협회장에 당선됐다. 의사협회는 18일 전날부터 이틀간 치러진 의협회장 보궐선거 투표의 개표 결과 추무진 후보가 5106표(49.4%)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반(反)노환규' 측의 박종훈 고려대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3653표(35.34),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도 1577표(15.26%)에 그쳤다.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3만6083명 가운데 1만449명만 투표에 참여, 28.96%를 기록했다.

추 신임 의협회장은 1960년생으로 환일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와 서울대 의대 동기다. 서울대 의학과 석사와 박사를 거쳐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약 9년간 충북의대 부교수를,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순천향의대 부교수를 지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메디서울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 회장, 경기도의 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제 37대 의협 집행부에서 자문위원·정책이사 등을 맡아 활동했으며 지난 대정부 투쟁에서 방상혁 기획이사와 함께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다.²¹⁾

기타 뉴스

1. 국민의료비 연 97조원 규모…GDP 대비 7.6% 수준(6/9)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97조원, GDP 대비 7.6%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적재원에서 나가는 돈은 53조원에 육박하며, 그 비중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10일 '국민보건계정 국제 심포지움'을 열고 2012년 국민의료비 산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잠정 97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7.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2000~2011년 증가율 11.7%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인 4%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적재원으로 나가는 돈은 5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9%로, 2000년 41.1%보다 줄어든 것이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될 자료를 OECD에 지출할 예정이다. OECD는 각 회원국들의 의료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보건계정 DB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매년 'OECD Health Data(헬스 데이터)'를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는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²²⁾

2.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 구성 윤곽(6/19)

늦어지던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 구성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원장에는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의원이, 야당 간사에는 김성주 의원이 내정됐다. 김춘진 의원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경희대 치대를 졸업한 치의학 박사로, 지난 17대부터 현재까지 3선으로 전반기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의정활동을 벌였다.

야당 간사로는 시장형실거래기제도 지적 등 전반기 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을 벌였던 김성주 의원이 낙점됐다. 새정치연합 측은 최근까지 김용익 의원과 유력 후보 고심하다가 이날 이같이 내정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의료 전반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던 남윤인순 의원은 복수 상임위원었던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복지위와 여가위 복수 상임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배정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 간사로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원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체의 폭은 여야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큰 폭의 변화 없이 상임위 교체를 희망하는 이언주 의원만이 국토교통위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고 김근태 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이 내정됐다고 알려졌다.

야당의 경우 이번주에는 늦어지던 상임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²³⁾

발간 자료

1. 정부기관

- ① 보건복지부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2. 국책연구소

- 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민간기관

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 연구보고서 ‘중소병원 육성·지원을 위한 로드맵 개발 - 위기요인 분석 기반으로’(6/18)

http://www.kihm.re.kr/kxe/index.php?mid=menu_21&document_srl=38800

② 의료정책연구소

③ 보험연구원

-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http://www.kiri.or.kr/html/reportList.asp?mStep=09&part=report&kc_list_num=9096&Cate1_num=1&Cate2_num=170&ContentCate=&search_key=0&search=&Cur_Page=1&v=1

④ 건강복지정책연구원

⑤ 한국u헬스협회

⑥ 한국금융연구원

⑦ 산업연구원

-
- 1) '병원도 호텔·여행업 가능, 의료법인 부대사업 입법예고', 2014.6.10., <경향신문>
 - 2) '24일 보건노조 5000명 총파업…'의료영리화 반대", 2014.6.13., <메디파나뉴스>
 - 3) '의료영리화에 들썩이는 병원노조, 서울대 등 파업예고', 2014.6.19., <데일리팜>
 - 4) '병원 4인실도 견보적용 11만 → 2만3,000원으로', 2014.6.10., <서울경제>
 - 5) '재난의료 예산 208억 '9.5배 증액'', 2014.6.10., <경향신문>
 - 6) '8월부터 모든 종합병원에 '비급여 가격표' 비치', 2014.6.11., <매일경제>
 - 7) '담뱃값 인상 이르면 내년 초…WHO 50% 인상 권고', 2014.6.12., <동아일보>
 - 8) '장애인 전동보장구, 구입 후 3개월 이내 신청시 급여 가능', 2014.6.14., <메디컬투데이>
 - 9) '건강보험에 간병보험 추가 신설 추진', 2014.6.16., <메디컬투데이>
 - 10) '김용익 의원, '의료 영리화 금지법' 발의', 2014.6.17., <프레시안>
 - 11) '건보료, '소득중심 단일화'…부과기준 체계 바뀐다', 2014.6.17., <중앙일보>
 - 12) '치과 2.2%, 한방 2.1% 수가인상…보험료율은 1.36%↑', 2014.6.19., <데일리팜>
 - 13) '전국 최대 규모 '대구메디센터' 준공', 2014.6.11., <청년의사>
 - 14) "75세 가입 가능' 노후실손보험 8월 출시', 2014.6.18., <서울경제>
 - 15) '폐업 진주의료원에 진주보건소 이전 추진 논란', 2014.6.19., <연합뉴스>
 - 16) '서울대병원, 임대형 민자투자 추진…노조 갈등 촉발', 2014.6.19., <메디파나뉴스>
 - 17) '도매협회, 안연케어 지분매각 적정여부 조사 요청', 2014.6.16., <약업신문>
 - 18) '의협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원천 반대"', 2014.6.13., <메디컬투데이>
 - 19) '5개 보건의약단체, 의료영리화 강행 중단 촉구', 2014.6.12., <메디컬투데이>
 - 20) "'병원내 의원 임대 조장하는 메디텔 허용 안돼'", 2014.6.19., <메디파나뉴스>
 - 21) '새 의협 회장에 '親노환규파' 추무진 당선', 2014.6.19., <아시아경제>
 - 22) '국민의료비 연 97조원 규모…GDP 대비 7.6% 수준', 2014.6.9., <데일리팜>
 - 23) '복지위 야당간사에 김성주·여당 이명수 의원 '내정", 2014.6.19., <메디파나뉴스>